

농진청, 내년 예산 1조877억원 편성

코로나19·기후변화 대응 미래 기술 개발 등에 중점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1년 예산안을 올해(1조249억원)보다 628억원(6.1%) 증가한 1조87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2021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대비 융·복합 연구개발과 비대면 기술보급으로 설정했다. 또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등 현장 중심의 신규·중액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

예산안에는 과수화상병 등 현장 문제 해결 실용기술 개발·보급(2,733억원, 22.5%↑), 미래 대비 정밀농업 기계화 등 농작업 생산성 제고(922억원, 49.9%↑),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R&D) 강화(1,079억원, 48.2%↑) 등 주요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재원이 반영됐다.

농진청은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기

술 개발·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과수화상병 종합방제체계 구축, 고위험 식물병해충 관리방안 마련 및 병해충 예방 방제 강화를 위한 예산(476억원), ▲병해충 종합방제체계 구축, 수요자 맞춤형 우량종자 육성·보급 및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811억원) ▲논에 타 작물 재배 및 발농업 기계화 등을 통해 발작물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한 농약 사용 여건 조성 등을 통해 건강한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944억원) 등을 편성했다.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및 바이오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의 정밀농업기술 개발, 스마트팜 융

합·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 개발 예산 563억 원 ▲드론·위성을 활용한 정밀농업 구현 등 첨단기술의 적용 확대, 농생명 분야 초고성능 슈퍼컴퓨팅 활용, 생명공학 및 기능성 소재 실용화 등 바이오 신성장산업도 육성에 1,028억원을 편성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인 복지 강화 예산으로는 ▲기상재해 선제적 대응, 기후변화 적응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 신소득 유망 아열대 작물 실증연구 및 지역특화 농업 연구개발 1,075억원 ▲농림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개발·확산 연구예산 및 취약계층을 위

한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예산 71억원이 있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기술창업,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등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를 지원한다(75억원).

농진청은 국내·외 농업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국제협력사업 추진과 개발도상국, 국제 연구기관과의 맞춤형 농업기술 협력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294억원).

허태웅 청장은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사업 설명 등을 통해 미반영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역 업체 더웬은협동조합(고창)과 농업회사법인버섯마루(진안)가 중국 청도전위료상무유한공사와 각각 약 3만5,000불의 샘플계약을 체결했다.

전북 농식품기업, 中에 7만불 샘플 수출 계약

고창 소재 더웬은협동조합 '짜먹는 도라지'
진안 농업회사법인 버섯마루 '버섯후레이크'
 청도전위료상무유한공사와 각각 3만5000불

본계약의 금액은 약 40만불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도라지 건강식품 및 버섯후레이크 등의 관련 업체 수출도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도전위료상무유한공사 김호철 대표는 “전북도에는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들이 많다”며 “이번 거래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앞으로도 전라북도의 다양한 상품을 발굴해 거래하고 싶다”고 말했다.

생진원 김동수 원장은 “전북도 농식품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은 물론 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우수바이어 발굴, 프로모션 지원 등을 통해 전북 식품의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착한 임대료 운동' 임대료 인하 4개월 연장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자사가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올해 12월까지 30%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은행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하며 15개 업체에 30%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이번 임대료 인하 연장으로 임차인들은 4개월간 약 800만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보유한 임대건물이 많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분들에게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남원시에 특별성금 2,000만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순창군과 전주시에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전달했고,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30여명은 남원시 하도마을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며 전북지역 수해복구에 앞장서고 있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신임 LX 김정렬 사장이 8일 본사에서 비대면 온라인 취임식을 열고 국토정보 분야 한국판 뉴딜을 직원들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국토정보 분야 뉴딜 완성”

김정렬 LX 신임 사장, 온라인 취임식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5개월간 기관장 공석을 깨고 신임 사장을 맡았다.

공사 20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정렬(金正烈) 사장은 8일 본사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갖고 직원들과 만나 “LX가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의 씨를 뿌리고 가며 국토정보 분야의 한국판 뉴딜을 직원들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를 위해 적재적소에 능력과 역량을 결집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속하고 혁신적인 미래를 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청렴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관행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며 “우리 모두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LX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신임 김 사장은 영국웨일즈 대학교에서 도시계획 석사학위를, 가천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역임했다.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 /김윤상 기자

다”고 강조하며, “청렴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관행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며 “우리 모두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LX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신임 김 사장은 영국웨일즈 대학교에서 도시계획 석사학위를, 가천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역임했다.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 /김윤상 기자

전기안전공사, 29일까지 '전북 청렴누리문화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감사 함종걸)가 지난 7일부터 29일까지 '다함께 청렴실천, 다함께 코로나 극복'을 슬로건으로 '제5회 전북 청렴누리문화제'를 연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비대면 방식의 청렴 문화제로 전환해 펼쳐진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청렴콘텐츠 공모전'은 청렴수기, 청렴웹툰, 청렴시진 등 3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국민 생각각함' 홈페이지(people.go.kr/idea)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10월 중 발표한다.

문화제 기간 중에는 각 기관별 특색에 맞게 '반부패·청렴 집중 홍보의 달'을 운영하며 온라인 청렴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됐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각 기관들은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스크를 공동 제작하고, 손세정제와 함께 보내 보육원과 영아원, 그

를 흠 등 아동시설에 지원할 계획이 다.

공사 함종걸 사장은 “청렴문화는 공직사회의 기본이자 책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기안전공사-LH공사

국민 주거안전 확보 협약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가 '한국판 뉴딜'의 새 길을 닦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양 기관은 지난 7일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한국판 뉴딜 지원 등에 관한 공동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그린뉴딜' 분야에서 환경친화적 그린 리모델링 협력 사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고충처리인

전주매일은 언론피해에 대한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을 임명하였습니다.

전주매일의 보도와 관련하여 구제를 요하는 고충이 있는 분들에게는 고충처리인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주시면 상담 과 함께 정의껏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고충처리인: 편집장 김진성 국장
- ▲전화: 063-288-9700
- ▲팩스: 063-288-9703
- ▲우편: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우편번호 55005)
- ▲E-mail: jimaeil@hanmail.net

- 2010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실적없음
- 2011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실적없음
- 2012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실적없음
- 2013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실적없음
- 2014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실적없음
- 2015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실적없음
- 2016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실적없음
- 2017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실적없음
- 2018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실적없음
- 2019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실적없음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회사 내에 두는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직무) 고충처리인은 전주매일의 신뢰도 제고와 신속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 직무를 수행한다.
 - 1. 보도로 인한 독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
 - 2.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한 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 3.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반론 보도와 손해 배상 권고
 - 4.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칼럼 집필 및 보고서 발행
 - 5. 그 밖에 독자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과 상담
- 제 3조 (권한)** 전주매일은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장하며 발행인을 포함한 실·국장 및 부서장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 2조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된 고충처리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 1. 고충처리인은 제 2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장은 성실히 협조한다.
 - 2. 고충처리인은 제 2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편집인에게 관련 부서장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인은 이에 성실히 협조한다.
 - 3. 고충처리인의 요청을 받은 편집인이나 관련 부서장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발행인과 고충처리인에게 서면으로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내 전산망과 게시판을 통해 공표한다.
 - 4. 고충처리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편집제작위원회나 지면평가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다.
- 제 4조 (자격)** 고충처리인은 회사 안팎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따로 정한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 1. 변호사로서 언론 보도에 관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 사람.
 - 2. 기자 경력 10년 이상(부장급 이상)인 전주매일 사원.
 - 3. 신문·방송 등 언론사 기자 경력 10년 이상이고 언론 보도에 관한 경력이 많은 사람.
 - 4.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 5. 법학이나 언론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 6. 이밖에 노사 협의를 통해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제 5조 (임명절차와 임기)**
- 1. 고충처리인은 전주매일 임·직원 및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발행인이 편집인과 논의해 임명한다. 단 임명에 앞서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한다.
 - 2.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3. 고충처리인이 임기 중에 공석이 되면 30일 내에 새로운 고충처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새로 시작한다.

제 6조 (활동지원 및 보수)

- 1. 회사는 전주매일의 취재보도와 관련해 독자가 고충처리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2. 회사는 전주매일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도 독자가 고충처리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 3.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편집국 구성원 가운데 담당자를 정해 도와야 한다.
- 4.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출장, 자료 수집, 회의 참석에 따른 경비와 고충처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5. 보수액은 고충처리인을 사내에서 임명한 때는 회사의 급여 규정에 따르면 사외에서 임명한 경우는 회사와 고충처리인이 합의로 정한다.

제 7조 (시정 등 권고 및 제심)

- 1. 고충처리인은 전주매일의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 등 권고나 필요한 사안이 생겼거나 피해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해 손해 배상이 필요한 경우는 그 사유와 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발행인에게 제출한다.
- 2. 발행인은 고충처리인의 시정 등 권고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는 의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심을 요청할 수 있다.
- 3. 고충처리인은 피신청인의 제심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발행인에게 통보한다.

제 8조 (시정 등 권고 수용 및 통보)

- 1. 발행인은 '고충처리인 운영규정'을 전주매일 지면과 운영중인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규정을 변경할 때도 같다.
- 2. 발행인은 고충처리인의 활동 내용을 해마다 전주매일 지면과 운영중인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제 9조 (운영규정 공포 의무)

- 1. 발행인은 '고충처리인 운영규정'을 전주매일 지면과 운영중인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규정을 변경할 때도 같다.
- 2. 발행인은 고충처리인의 활동 내용을 해마다 전주매일 지면과 운영중인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제 10조 (시행) 본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